

[주간동향] 2006. 4. 17~4. 24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한명숙 첫 여성 총리 탄생
-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제도 마련
-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시험운영
- ❖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
- ❖ 여성교수의 비정년트랙 비율 증가

❖ 한명숙 첫 여성 총리 탄생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한명숙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7명 중 264명이 참여해 찬성 183, 반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첫 번째 여성총리이자,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고건, 이해찬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총리가 되었다. 20일 열린 취임식에서 한 총리는 “민생 현장을 찾아 지친 이들의 손을 감싸드리는 민생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으며, “서민생활 안정, 비정규직 처우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교육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부동산 안정대책, 국민연금 개혁은 발등의 불”이라며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좋은 여성들을 많이 천거하고 그런 여성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내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국민과 함께 환영하며, 한 총리가 국민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적정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나 “여

권 신장의 상징이자 한국 정치 발전의 또다른 과거”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정치세력연대는 인준 직후 ‘대한민국 첫 여성총리, 한명숙 총리의 탄생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처한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여성과 장애인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절대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정책적으로 치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유능한 여성인재를 적극 기용함으로써 남녀 모두의 이해가 국가정책에 고루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성계에서는 “한명숙 총리의 국회비준은 그동안 민주화와 성평등을 위해 일해 온 경험과 여성·환경부 장관과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경륜과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 총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총리가 된 인물로 여성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지난 4월 20일은 제 2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정부 각 부처 및 NGO 등 다양한 관련행사가 마련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이에 앞서 12일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약 8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연간 40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아동 출생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주제발제에 나선 오혜경 카톨릭대 교수는 “여성장애인은 임신에 대한 왜곡된 시각,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상태, 건강권에서의 소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부족, 육아문제의 심각성 등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채 차별과 편견, 그리고 무시와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교수는 “여성장애인은 각 장애유형에 맞는 개인별 차별화 전략에 의한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국공립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권리제공과 함께 보육료 지원, 보육도우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여성장애인 문제의 경우는 장애인 일반문제와 달리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여성장애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1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장애인 복지향상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이 산부인과를 이용할 때 보험혜택을 늘리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과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30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

곤충 지원에서 막대한 돈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청사나 사회복지관에서조차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이 경찰의 피해구제와 사건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전국 6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총 479건으로 2001년의 2.5배에 육박한 가운데 성폭력이 급증세에 있으며, 2명 이상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 또한 많고, 특히 친인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이 이중적 차별에 고통받는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대안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일상 속에서 그들의 권리와 고용에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제도 마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일 ‘제 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를 확정하였다. 이 중 여성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난 월 5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월 10만~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금 지급시기를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 분기’로, 지원기간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 휴가 개시일 이후’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똑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마련된다. 이는 전일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정은 오는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해 출산여성의 배우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7월부터는 임신했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시행하여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관련규정이 육아시간,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에 한정되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도입이 시급한 제도를 선별하고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신설을 위한 무상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선호 직종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워크넷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맞춤형 고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시험운영

여성가족부는 보육행정의 효율성 및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를 연결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올 9월부터 전국 보육시설 및 행정기관 보육담당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왔던 보조금신청을 자동계산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신청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프로그램을 사전 운용하여 문제점을 발견·보완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이처럼 시험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9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전국보급과 함께 보육행정 전산화 필요 부분에 대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점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전국보급으로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의 행정능률과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

농림부는 19일, 「제 2차 여성농업인정책」을 수립하고 4개 여성농업인단체(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관으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여성농업인정책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01~2005년 동안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날 발표된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발전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실행할 계획에 있다. 특히 요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2006년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 창업활동 지원, 리더십 배양, 여성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농기계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연금, 보험, 의료지원, 영유아양육비 등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7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농림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가운데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농업인의 파트너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성교수의 비정년트랙 비율 증가

교수신문이 2006년 상반기 신임교수 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천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백38명(23.7%)이 재임용심사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약직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년트랙 임용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의 14.9%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상당수 대학이 비정년트랙 임용 규모를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교수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채용된 교수 중 여성은 5백92명 25.7%로, 전체 채용교수 중 처음으로 4분의 1선을 넘었다. 또한 신임 여교수 비율은 1998년 12.8%, 1999년 15.3%, 2002년 17.6%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년 전 채용교수 중 20%를 돌파했다. 그러나 신임 여교수 중 비정년트랙 임용 비율이 31.6%에 달해 남성의 20.5%에 비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여성 인력이 비정년트랙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교수직에서조차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